

북으로 보내는 물품 검색 강화

운약 드러나는 정부 '조율된 조치'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정부의 조율된 조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크게 보면 대북 경협 관련법령을 정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남북 경협 및 교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민관 분리론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화물검색 강화하고 품목 조정=정부는 일단 대북 반출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남북 교역 품목을 조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검색 강화는 크게 세관과 남북해운협회사, 이 두 틀을 기본으로 해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대북 반출품목에 대한 세관의 엄격한 화물검색을 실시하는 동시에 남북해운협회사에 따라 북한 화물선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북한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감시활동에 그치지 않고 제3국을 오갈 때 우리 측 항구에 기항하는 북측 화물선에 대한 검색 활동까지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협 관련 법령 정비...WMD 검증 장치 검토 금강산 보조금 끊고 철도 자재·장비 제공 유보

◇ 대북 자금이동 투명성 높고 고심=관심을 끄는 것은 대북 송금의 투명성 확보 문제다. 유엔이 북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내놓을 경우에 대비해 국내법적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개정할 수도 있지만 별도 규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도 적지 않은 상태다.

◇ 금강산 보조금 끊고 철도자재 제공 유보=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일부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과 대북 철도자재장비 제공 유보 조치를 꼽을 수 있다. 금강산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경비 보조와 도로포장과 소방시설 건설 등에 쓴 시설 투자 보조로 나뉜다. 그러나 이들 보조 중단은 규모

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이 중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관광 대가는 더욱 미미하다는 점에서 상징적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투자심리 약화까지 겹치면서 10월 중으로 예정했던 1단계 2차 분양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와 함께 임금 지불체계의 조기 도입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도로연결과 관련한 자재 제공 문제는 당국 간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철도시험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경기도에 불구하고 북측이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자재장비 제공을 유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유엔 대북 결의안 이행 방안

-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에 안전장치 대폭 강화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강화
- 승인 요하는 물품과 포괄적 승인품목 조정 방안 검토
- 개성공단: 추가 분양 무기 유보, 개성공단 내 임금 지급방식을 북측 기관 거치지 않고 북측 노동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직불제 도입
- 금강산 관광: 고사와 학생에게 지급되는 관광 보조금과 도로 등 신규 시설 투자와 관련 된 보조금 지급 동결
- 철도도로 연결사업: 북측에 사전으로 주된 자재·장비의 추가 제공 보류
- 대북 반출 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색 강화
- 우리측 항구에 기항하는 북측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 북 수해복구 물자 지원사업: 쌀은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지원, 시멘트(7만5000)와 덤프트랙(50대) 등 지원 중단. (상황에 따라 쌀 지원도 전면 중단)
- 대북 쌀 차관 50만톤 비료 제공 유보

현장과 시각

'청렴' 공인받아라



최재호

체육부 차장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청렴도 평가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 압력' 때문이라는 설도 나온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02~2004년 국가청렴위원회 의뢰의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노조는 청렴도 향상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일선 학교 행정실장 등 7급 일반직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노조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설문 내용에는 '학교현장에서 비자금 조성한 경험이 있느냐', '청탁을 통해 좋은 자리에 가거나 승진했느냐' 등의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당시 설문에 응한 상당수 공무원들은 '인사 청탁을 하겠다'는 등 '솔직한' 답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청렴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청렴도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조사결과 '외부 인사청탁'과 '이권개입'이 줄었고, 과거에는 학교기관에서 비공식 경비를 만들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눈에 띄게 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등 상급기관 접대문화는 지난 2005년부터 노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비공식경비를 지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후 확실하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면서도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렴도가 높아졌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기자의 집요한 공개요구에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여전히 관리자(교장)들이 과거의 회계업무 향수에 젖어 적법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같은 경우 교장에 근무자가 있어 때문에 해당학교 행정실장이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조가 설문조사를 한 현재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신설학교 납품비리로 홍역을 치르는 등 지역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때에도라도 노조는 청렴도가 개선됐다고만 하지 말고 그 내용을 공개해 '청렴해졌음'을 당당히 공인받아야 한다. 또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았으면 적나라하게 공개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청렴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

청렴을 자랑할 용기가 없는 것인지, 처벌을 드러낼 배경이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비공개는 불신만 부를 뿐이다.

/lion@kwangju.co.kr



한미연합 연안상륙훈련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김포 연해역에서 해병대 주관으로 열린 한미연합 연안상륙훈련에서 수륙양용장갑차들이 상륙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근태 의장, '만류'속 오늘 개성행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인 삼덕통상(신발), 신원(의류), 로만손(손목시계) 등을 방문해 북측 근로자들의 근무하는 모습과 근로환경 등을 직접 살펴보고 토지공사 및 현대아산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입주업체 법인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예토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또 이날 열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주년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의 개성 방문에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 이미경 비상대책위원, 원혜영 사무총장, 이계란 비서실장, 이복희 전략기획위원, 우상호 의원,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고경빈 단장 등이 동행하며,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도 현지에서 방문행사를 지원한다.

남북교류 지속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마련된 김 의장의 이번 개성 방문은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당내 중도파와 인사들의 만류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는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엔에 우리 운명 맡겨서야"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발언 파문

野 "국제사회 노력에 찬물" 비난 비등

19일 국회 국방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송민순 NSC 사무처장 겸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날 언급한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발언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다수의 여야 국방위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인 송 실장이 민감한 시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거부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유엔을 거부하는 듯하고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 입장에 대해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스스로의 국가적 지위를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제발 신중하게 접근하고 말을 아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유엔결의안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유엔에 운명을 맡기는 것"이란 말이나"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송 실장은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 나라의 운명을 다자적 결정에 맡기지 않는다. 유엔결의 해석을 이해하는데 자기 중심을 잘 잡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명하고 "상호간 문제를 가져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다자화이지만 내 문제를 동네에 내놓고 너희가 결정해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자화"라고 반박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NSC 일부 핵심인사들이 작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했던 것

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청와대가 작년 SCM에서 외교부나 국방부 실무자 의견을 정면으로 제쳐놓고 강력히 주장했거나 대통령이 직접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 누구냐"라고 추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송 실장과 일부 야당 의원들간에 날카로운 설전도 벌어졌다.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은 송 실장을 상대로 "역사에 죄를 짓지 마라. 북핵은 일종의 암 덩어리 아니냐. 크기 전에 제거해야지, 자꾸 키워서 핵실험까지 했다"고 직격탄을 날리자 송 실장은 "암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역사가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느냐"며 불쾌감을 표실했다.

송 실장은 또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2조3천억~8조원까지 금전을 지원했다. 작통권 환수도 먼저 제의했다. 외환죄에 해당하는 짓을 계속한 것 아니냐. 내란,외환죄는 대통령도 적용된다"고 지적하자, "국가안보를 책임진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말씀같다. 아무리 국회라도 형법 체계를 갖다 대서 국가정책 책임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 1 회 광주하우징엑스포

2006. 10. 19(수) ~ 22(토) / 김대중컨벤션센터

10:00 ~ 18:00

최신 건축자재와 홈인테리어 제품들

광주하우징엑스포에서 확인하십시오!

1 전시관

신축주택, 리모델링 주택, 인테리어, 가구,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 전시

2 전시관

주택금융, 주택대출, 주택연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